

도의회 환복위, 내년 예산 심사 시작

23일 환경녹지국·24일 복지여성보건국·25일 새만금추진지원단·보건환경연구원 대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3일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24일 복지여성보건국 25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환경녹지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7억 7,592만원(전년 대비 15.49%) 증가한 2,592억 4,436만원 규모로 편성해 회의에 제출했다.

앞서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 사업들에 대한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최훈열 위원장은 첫 예산서안 심사 대상인 '환경녹지국'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마다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서에 주문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다"며, "이번 제10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시

정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시작을 알렸다.

이어 "예산서안 심사는 '돈 심사'가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 내역심사가 중요하다"며 "산술기초가 불분명하고 어정쩡하거나 기대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운 부위원장(전주1/민주당)은 "예산의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돼 있는지, 투자

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재원은 충분한지 꼼꼼하게 따질 것이고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성일 부위원장(군산4/국민의당)은 "송하진 지사 공약과 국책사업,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무성, 대선 불출마 선언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것"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이었던 대선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식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고, 저 역시 그간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왔다"며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의 직전 당 대표로서 지금의 국가적 혼란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이라며 "정치는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국가적 위기수습을 위해 무너져 내린 헌정질서를 복원시켜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보수의 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해서 갖가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주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논의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발의를 앞장서기로 했다"고 박 대통령 탄핵 발의에 자신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새누리 원외 8인 탈당 새누리당 김성민(왼쪽부터), 정문헌, 이성권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8명의 위원장과 함께 정두언, 정태근, 김동성, 박준선, 김정권 위원장 등도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송하진 "전주종합경기장 사업 정치적 갈등 아냐"

"전주시의 약속을 믿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정치적 갈등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다" 송하진 전부지사는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새로 짓는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재검토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또다시 도와 전주시의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원점에 서부터 확실하게 판단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행자부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도가 부정적 의견이 담긴 공문을 행자부에 전달한 것이 바탕이 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우리는)문제가 많음에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한가지만 행자부에 올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4년 전주시가 전북도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달라고 했고 호텔과 컨벤션, 쇼핑센터 등을 민자사업을 추

진한다고 했었다"라며 "그러나 전주시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는 민자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바꾼 것에 있다"라며 "쉽게 말해 A와 계약을 하고 B와도 계약을 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송 지사는 "전주시의 약속"을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당초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라며 "전주시의 약속을 믿고,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사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21일 황교안 현 총리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에 내정된 김 장관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24일 만이다.

내각과 청와대의 사정라인 책임자들이 동반 사의표명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

민주당 "박 대통령, 혈세를 얼굴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청와대가 태반주사 등 미용에 쓰이는 주사제를 대량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얼굴에 퍼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에 '불법 피부미용 시술소'를 차려도 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구입 목록에는 입에 담기 민망한 치료제까지 포함돼 있다니 이 막장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사제를 공급한 녹십자의 자회사인 녹십자아미메드의 원장이 바로 최순실 자매에게 대리 처방을 해줬고, 청와대에 매주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용병원 출신의 김성만 의사는 점에서 공급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은 도위시 한 채 얼굴 미용에만 신경을 쓰는 박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털끝만큼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과 사법부는 국정을 저장거리 투전관으로 전락시킨 박 대통령의 죄상을 낱알이 밝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

검찰, 29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아 요청했다. 29일까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요청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유명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라며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사정으로 하루를 앞 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29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이 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로 송부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 장소와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먼저 조사 시기를 확정하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